베네수엘라

총파업 사태 지속으로 정국 불안의 해결 기미 없어

2002년 12월 야권의 총파업 선언 이후 약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진퇴를 둘러싼 親차베스 세력과 야당간의 대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주요 산업인 석유 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생필품 부족 현상도 나타나는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미국 및 중남미 국가들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차베스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양측 모두 각자의 요구조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가신용도 등급을 일제히 내린 바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동국사태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동국의 신용도 등급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 대치로 석유 산업 마비 상태

2002년 12월 2일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자연맹(CTV)과 민주협의회, 상공인연합회, 국영석유회사(PDVSA) 등은 차베스 대통령의 중도 퇴진 및 재신임 투표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反차베스 진영은 쿠데타가 발생한 4월 11일을 기념, 매월 11일을 반정부 시위일로 지정하고 비교적 평화적 방법에 의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차베스 탄핵을 위한 일련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차베스 측은 중도사퇴 및 재신임 투표 실시 등 야권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며, 야권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수도권 8개 지역에 대해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차베스

〈표〉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1. 11	- 개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베스 49개 개혁법안 의회 통과
2001. 12	- 재계와 노동계, 49개 개혁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2002. 4. 11	- 반정부 쿠데타 발생. 차베스, 실각 후 2일만에 복귀
2002. 9. 25	- 反차베스 세력, 대법원의 차베스 탄핵소송 기각 결정에 항의하여 대규모 시위 전개
2002. 12. 2	- 노동자연맹(CTV), 상공인연합회, 국영석유회사(PDVSA) 등 차베스 퇴진과 재신임 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2003. 1. 3 ~ 1.4	- 親차베스 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충돌로 유혈사태 발생
2003. 1. 9	- 금융노조, 총파업 가세

자료: 필자 정리.

본인은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헌법에 예정된 2003년 8월[1]까지는 절대 불가하며, 국민투표에 의해 불신임이 결정되더라도 계속 집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2] 이에 따라 양측은 극단적 대치를 지속하여 수 차례 유혈충돌이 발생하였고, 일부 언론과 은행이 총파업에 가담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3] 이 과정에서 동국 GDP의 1/3, 수출의 3/4, 정부 수입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총파업 전 일산 290만 배럴에 달하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03년 1월 초 현재 20만 배럴로 급감하여, 수출은 물론 국내 가솔린 공급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생필품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효과 없어

베네수엘라 사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인근 국가들은 적극적 중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측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원유수입량의 15%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중남미 지역의 안정과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총파업 사태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정국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의 군사 쿠데타 발생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02년 카터 前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의 적극적 중재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주기구(OAS)를 통한 중재 노력이 효과를

1) 베네수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신임 투표 실시를 허용하고 있음.
2) 차베스는 현 사태를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양보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음.
3) 야권은 추가적으로 납세거부 등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 제헌의회 소집 등 추가 조치를 검토중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수주일 내에 조기 대선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들도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월 15일 에콰도르에서 '베네수엘라를 아끼는 국가들의 모임'을 결성, 적극적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이미 차베스 대통령은 1월 2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동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조기 대선의 실시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중남미 국가들은 브라질이 가솔린, 도미니카공화국이 쌀, 콜롬비아가 우유를 제공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들 국가에 대해 베네수엘라 위기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도 등급 하향 조정

2002년 차베스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시위의 빈발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가신용도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4]한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2003년 초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거나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Fitch IBCA는 2003년 1월 10일 베네수엘라의 장기외화표시채권 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하향 조정의 사유는 1개월 반 이상 계속된 총파업으로 석유수출이 급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기 외채상환능력 약화 가능성이다.

2003년 3월 8억 달러의 외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데 이어 대규모 국내채의 만기도 비슷한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지급불능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차베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해도 석유생산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베네수엘라 국가신인도의 조기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배 상 욱】

4) Moody's가 2002년 9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S&P도 11월 베네수엘라의 장기외화표시채권 등급을 종전의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